

財 政 經 濟 部

財 政 經 濟 部

1. 總 括

지시사항 건수		완 료	관리종결	추진중		미 착 수	비 고
				정 상	부 진		
총 계	65	44	1	20	-	-	-
단독주관사항	35	20	-	15	-	-	-
공동지시사항	30	24	1	5	-	-	-

2. 指示事項 目錄

○ 完了事項

일련번호	코드번호	지 시 제 목	완료연월일
1	03-31-01	소비자단체의 물가감시역할 강화	1998. 4.15
2	03-31-02	기업인수 및 합병 활성화	1998. 5.25
4	03-31-03	소수주주권 강화	1998. 5.25
5	03-31-04	물가통계	1998. 5. 1
29	03-31-05	기업구조조정 시급	1999. 9.30
51	03-31-06	공기업의 고율이자 조장 조사	1998. 9.30
70	03-31-07	각종개혁정책의 철저한 추진	1999. 9.30
71	03-31-08	중소기업지원 및 경제체질 강화	2000. 6.30
127	03-31-09	외국인투자의 한시적 세제지원방안 검토	1998.11.17
140	03-31-10	국제금융동향점검 및 구조조정노력 강화	2001.12.20
201	03-31-12	외환자유화의 차질없는 추진	2001. 4.30
251	03-31-13	중·저소득층 지원대책	1999.12.31
255	03-31-14	수도권집중 해소대책의 수립	1999. 8.23
261	03-31-15	소득계층 양극화현상의 시정	1999.12.31
273	03-31-16	물가안정대책 수립	1999.12. 3
278	03-31-17	주세인상에 대한 對 국민 홍보	1999.12.31
281	03-31-18	부산파이낸스사 문제에 대한 대책	2000. 6.30
402	03-31-23	6개 금융기관 완전감자 관련 대책 강구	2001. 5.30
414	03-31-27	국내자금의 해외도피 차단노력 강화	2001.12.31
527	03-31-31	기업의 투명성 제고방안 강구	2001.12.27
10	03-70-01	실업문제 종합대책 수립	2000.12.23
48	08-70-03	경제정책 관련 대외홍보 강화	1998.12.20
65	03-70-05	기업부실판정결과 후속조치 철저 추진	1999. 3.31
113	03-70-07	재계와의 협력강화	2000. 6.30
137	03-70-08	각부처의 경비절감노력 강화	1998. 9.23

일련번호	코드번호	지 시 제 목	완료연월일
138	08-70-09	수해관련 대통령 지시사항	1998. 9.15
157	09-70-12	방일 후속조치 철저	1999. 3.31
164	07-70-15	컴퓨터 2000년 문제관련	2000. 6.30
175	08-70-16	공정한 인사행정	1999.12.31
183	09-70-17	설 연휴 대책	1999. 1.25
264	08-70-25	수해방지 종합대책의 차질없는 추진	2000.12.27
276	08-70-27	8·15 경축사 후속대책의 철저한 추진	1999.12.28
282	08-70-29	대 국민과제홍보	1999.12.20
284	03-70-30	국가채무현황에 대한 정확한 내용 홍보	1999.11.30
304	03-70-32	각 부처 개혁방안 보고	2000. 3.20
332	08-70-34	공정한 선거관리	2000. 4.30
353	03-70-37	국가자산의 효율적 관리	2001.12.31
366	09-70-39	금년도 업무보고 내용의 철저한 실천	2000.12.30
382	08-70-41	추석연휴와 소외계층 위로	2000. 9.31
385	03-70-14	증시안정과 경제불안심리 해소	2001. 4.30
386	03-70-45	공기업 감사결과에 따른 철저한 개선	2001.12.31
397	03-70-46	공공부문 노사분규에 철저대비	2000.12.30
399	03-70-49	시장의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	2001.12.31
410	08-70-50	설 종합대책 마련	2001. 1.22

▲ '98 - '00년 완료사항은 「1998년 - 2000년도 대통령지시사항 추진상황」 책자 참조요망

○ 管理終結事項

일련번호	관리번호	지 시 제 목	비 고
159	03-70-14	경제회복대책의 실효성 확보노력 강화	

○ 推進中인 事項

일련번호	관리번호	지 시 제 목	비 고
194	03-31-11	우리사주신탁제도 적극추진	정상
310	03-31-19	빈곤퇴치를 위한 대책 수립	"
311	03-31-20	산·학·연·정 협력의 강화	"
322	03-31-21	경제안정대책 강구	"
389	03-31-22	서민생활 안정 대책	"
393	03-31-24	공적자금의 투명한 집행	"
412	03-31-25	기업금융활성화에 대한 대책 마련	"
413	03-31-26	외환시장 안정방안 강구	"
414	03-31-27	국내자금의 해외도피 차단 노력 강화	"
415	03-31-28	중소기업과 서민에 대한 각별한 대책 수립	"
494	03-31-29	진월세 대책 마련	"
507	03-31-30	사금융의 폐해근절	"
528	03-31-32	대내외 경제문제 적극 대처	"
534	03-31-33	금융기관 민영화 추진	"
538	03-31-34	기업규제 완화	"

일련번호	관리번호	지 시 제 목	비 고
539	03-31-35	중국의 WTO가입 대비 철저	정상
298	03-70-31	중산층과 서민생활 안정에 주력	정상
392	03-70-46	4대부문 12대 핵심 개혁과제의 차질없는 추진	"
422	08-70-51	인사청탁 근절	"
525	06-70-58	2002년 월드컵대회 준비 철저	"
531	07-70-58	전자정부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

3. 完了指示事項

1) 國際金融 動向 點檢 및 構造調整 努力 強化 : 140(03-31-10)

가. 指示內容(1998년 9월 1일, 제40회 국무회의시)

- 구조조정을 되도록 빨리 완료하여 불확실성의 제거로 시장기능과 대외신뢰도가 제고되도록 할 것

나. 措置內容

- 회생불가능한 금융기관은 퇴출, 합병 등을 통하여 신속하고 과감하게 정리
 - 97년말 이후 '01.11월말까지 인가취소·합병 또는 자진해산 등을 통해 604개사의 금융기관을 퇴출

(단위 : 개사)

	97말	01.11말	정리
은 행	33	22	11
비은행	2,068	1,531	593

* 증권 16, 보험 9, 투신 6, 금고 12개사 등 56개사 신설

- 회생가능한 금융기관은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부실채권 매입 및 증자지원을 통하여 조기 정상화함으로써 원활한 자금중개의 기반 마련
 - 기조성된 정부보증채권발행자금 64조원을 지원완료('99.12말)
 -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를 위하여 20.5조원
 - 자산건전성 제고 및 퇴출을 위하여 출자·예금대지급 등으로 43.5조원을 지원
 - 금융구조조정의 마무리단계에서 대우그룹부실화 등 예기치 못한 경제상황의 변화로 자금 소요가 증가함에 따라 추가로 정부보증채권발행자금 40조원을 조성('00.12월)하여 지원완료
 - '01.12월말까지 금융기관에 출자, 예금대지급 등 지원
- 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를 통해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
 - 제일은행을 뉴브리지사에 매각('00.1월)
 - 한빛, 서울, 평화은행 등 6개 은행에 출자('00.12월 4.1조원 출자)하여 자본건전성 제고
 - 한빛, 평화, 경남, 광주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우리금융지주회사 출범('01.4월)
 - 신한금융지주회사 출범('01.9월)
 - 수협중앙회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약 1.1조원을 출자완료('01.12월)
- * 은행의 부실제거를 위한 경영개선조치 및 지속적인 구조조정노력으로 자기자본비율(BIS) 및 여신건전성 등 자산건전성이 향상

일반은행 자산건전성 추이

- BIS비율(%) : '97(7.04) → '98(8.23) → '99(11.70) → '00(10.60) → '01.9(11.10)
- 고정이하여신비율(%): '99말(12.9) → '00말(8.0) → '01.9(5.04)

-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4.9조원을 출자지원('00. 1월 3조원, 6월 1.9조원)
 - 보험사의 경우에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국민·조선·동아·태평양·한덕생명을 공개 매각
 - 대한생명에 대하여는 공적자금을 투입한(2.1조원) 이후 경영정상화와 매각을 병행 추진중
 - 부실손보사 중 국제화재는 예금보험공사 주관으로 3자매각 추진중, 대한화재는 공적자금을 투입한 후 대한시멘트에 매각완료
 - 서울보증에 대하여는 공적자금 투입을(10.25조원) 마무리하고 경영정상화 추진중
 - 금고, 신탁과 같이 소형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서민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부실기관 발생시 예금대지급을 통하여 신속하게 정리
 - * '97.12 ~ '01.11월 : 금고 121개, 신탁 405개사 정리
 - 자산관리공사를 통하여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
 - '01.11월말까지 자산관리공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100.2조원의 부실채권을 매입
- 금융기관이 인수·합병 등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
-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령 개정
- 금융기관의 대형화·겸업화를 통하여 급변하는 국내외 금융환경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제정 추진
- 금융지주회사법('00.10.23) 및 동법 시행령('00.12.20) 제정완료
 - 금융지주회사를 통해 이종·동종금융기관을 자회사형태로 지배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금융산업의 대형화·겸업화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은행지주회사 소유규제를 국제기준에 적합하도록 하는 등 은행법개정에 병행하여 개정법률안 국회상정('01.12월)

다. 事業成果

- 인가취소·합병·자진해산 등으로 604개('01.11말)의 부실금융기관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정리하여 건전한 금융산업 발전의 기반을 마련
- 회생가능한 금융기관은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조기 정상화함으로써 원활한 자금중개의 기반을 마련
-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여 금융기관의 인수·합병 등을 통한 자율적 구조조정의 기반을 마련
- 금융지주회사법등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여 금융기관의 대형화·겸업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의 기반을 마련

2) 外換自由化의 蹉跎없는 推進 : 201(03-31-12)

가. 指示內容(1999년 3월 23일, 제10회 국무회의시)

- 충분한 외환보유고를 확보(최소한 500~550억불)
- 기업과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에 만전을 기함
- 조기경보체제를 갖추고 국제금융기구와도 협력을 강화하여 위험에 대처함
- 외환자유화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 차질없이 추진함

나. 措置內容

- 충분한 외환보유고의 확충
 - 경상수지 흑자지속과 금융기관 외화예탁 회수 등 지속적인 외환보유고 확충노력으로 2000년말 현재 가용외환보유고는 '99년말(740.5억불) 대비 30.0% 증가한 962.0억불에 달함
- 금융기관과 기업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기반 마련
 - 금융기관의 단기외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무역신용을 건전성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유동성비율을 상향조정(2000.6.10)
 - 외화자산/부채, 외화파생거래현황 등 기업의 외환관련 공시제도를 강화(2000.5)하는 한편 금융기관이 기업의 외환리스크를 평가하는 기업 외환리스크 관리강화방안 추진(2001.1 시행)
- 조기경보체제 구축 및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 강화
 - 국제금융센터가 조기경보시스템(EWS)을 운영하여 외환위기 재발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인 모니터링을 수행
 - ASEAN+3 주요국들이 참석한 가운데 역내 조기경보시스템 개발 관련 국제세미나를 개최(2000.11.30)하는 등 역내 위기재발 방지를 위한 금융협력을 강화
- 외환자유화에 대비한 보완대책 수립 추진
 - 외환거래 모니터링 기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외환전산망을 보완개발(2000.9.1)
 - 제2단계 외환자유화에 대비하여 자본거래 허가제를 5년간 연장하고 채권회수의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법을 개정(2000.10.23)하였고, 후속조치로서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하여 국세청 통보제를 강화하고 해외예금 잔액의 한국은행 보고제를 도입(2001.1.1시행)

다. 事業成果

- 제1단계 외환자유화에 따라 대외거래 자유화가 확대되고 외환시장이 활성화되었으며 2001.1.1 잔존규제를 폐지하는 제2단계 외환자유화를 시행하게 됨으로써 1998. 6월 발표된 2단계 외환거래자유화 계획을 마무리

3) 6개 金融機關 完全減資 관련 對策講究 : 402(03-31-23)

가. 指示內容(2000년 12월 19일, 제51회 국무회의시)

- 최근 일부 금융기관 감자에 대한 정부와 은행관계자들의 책임문제와 소액주주관련 대책을 강구하여 보고하기 바랍

나. 措置內容

☐ 소액주주 관련대책

○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 '00.12.18 주식매수청구 공고

* 주식매수가격(원) : 한빛(340), 서울(308), 평화(166), 광주(200), 제주(342), 경남(211)

- '01.2월말~3월초 관할법원의 결정을 거쳐 은행제시가격대로 주식매수가격을 확정하고 주식매수대금 지급

○ 신주인수청약 등의 기회부여

<한빛·평화·광주·경남은행>

- 우리금융지주회사가 신주인수권부사채(BW) 투자기회 부여계획 마련('01.5월)

<제주은행>

- 제주은행이 유상증자를 통한 신주인수기회 부여계획 마련('01.5월)

☐ 은행관계자 등의 책임관련

○ 예금자보호법('00.12월) 및 동 시행령('01.3월) 개정

- 부실기업 등 은행부실과 관련된 책임추궁대상을 확대하여 건전한 경영풍토 조성을 유도

- 부실 채무기업에 대한 조사권 및 손해배상청구 등 관련규정 신설

☐ 정책당국의 책임 관련

○ 공적자금의 조성·운영 등 전과정에 대한 점검 실시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설치('01.2월)

다. 事業成果

☐ 소액주주 보호

○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2조에 의거 주식매수 청구권을 부여하여 감자손실 일부 보전

○ 아울러, 우리금융지주회사(BW발행), 제주은행(신주발행)의 주주로 참여할 수 있는 투자기회를 부여하여 경영정상화에 따른 이익향유 기회 제공

☐ 은행부실에 책임있는 은행 경영진,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강도높은 책임추궁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 강화

4) 國內資金의 海外逃避 遮斷 勞力 強化 : 414(03-31-27)

가. 指示內容(2001년 1월 15일, 재정경제부 업무보고시)

- 예금부분보장제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등의 도입으로 국내자금의 해외도피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이를 차단하는 노력을 해야 함

나. 措置內容

- 외환전산망을 통하여 외국인투자자금 및 국내자금 유출입 투자동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실시
- 한국은행 · 금융감독원 · 국제금융센터 등이 참석하는 외환시장 모니터링 회의를 개최하여 모니터링 기관간 협의 강화('01년 5회)
- 국세청 · 관세청 · 한국은행 ·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외환자유화추진 점검반 회의 개최('01년 4회)
- 자유화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보완사례를 발굴하여 이를 반영하기 위한 통첩 및 고시 발령('01.4월, 7월, 11월)
-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률 제정('01.9.27) 및 금융정보분석원 설립('01.11.28)
- 금융정보분석원 및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정보분석기능을 강화하고 불법자금 유출입현황을 지속적으로 감시
 - 금융권에서 통보받거나 자체수집한 외환거래자료에 대한 국세청 · 관세청의 분석시스템 구축
 - 분석된 자료를 조세탈루 및 불법 외환거래 조사를 위해 적극 활용

다. 事業成果

- 제2단계 외환자유화, 예금부분보장제,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 시행후 지난 1년간 경상 · 자본 거래의 동향을 외환자유화 점검반회의 및 외환 전산망을 통하여 모니터링한 결과 당초 우려했던 국내자본의 해외유출 등의 부작용이 크게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관련 제도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률 제정 및 금융정보분석원이 설립됨으로써 국내자금의 해외 유출입 동향에 대한 정보분석기능 및 불법자금 감시기능이 한층 강화되었음
- 외환거래자료 분석시스템 구축 및 분석된 자료의 상시활용으로 국내자금의 불법 해외도피 가능성을 사전 차단
- 예금부분보장제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등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에 기여

5) 企業의 透明性 提高方案 講究 : 527(03-31-31)

가. 指示內容(2001년 7월 2일, 제27회 국무회의시)

- 노사관계안정,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서는 기업의 투명성이 제고되어야 함
 - 우리기업의 국제신용 및 주가가 저평가되고 있는 것, 노사관계가 불안정한 것도 기업의 투명성이 부족하기 때문
 - 기업의 투명성은 곧 기업의 생명과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를 보완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기 바람

나. 措置內容

- 기업지배구조개선 실태조사
 - 증권거래소가 633개사를 대상으로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설치등 기업지배구조개선 실태 조사('01.12월)
- 공시제도 개선
 - 자산총액 2조원이상 대규모법인에 대하여는 공시기준을 일반법인의 1/2 수준으로 강화 ('01.8.1 금감위규정 개정)
- 기업경영투명성제고를 위한 기관투자자 역할 제고방안 발표(2001.8.6)
 -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운용실적보고서 및 영업보고서에 의결권 행사결과와 사유 표시
 - 투신사 및 Mutual Fund는 의결권행사에 대한 명문화된 내부지침을 마련하고 의결권행사 전담조직 마련
 - 일정규모이상 투자기업에 대한 의결권행사 의무화
 - *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증권투자회사법 개정안 국회제출(2001.12)
- 자율감리제도 도입추진
 - 공인회계사회에 자율감리위원회 설치('01.9월)
- 증권분야 집단소송법안 국회제출('01.12.27)

다. 事業成果

-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시장의 견제감시 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실제기업경영 행태와 관행의 개선을 유도

共通 1) 國家資産의 效率的 管理 : 353(03-70-37)

가. 指示內容(2000년 4월 26일, 기획예산처 업무보고시)

-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국가자산을 내 것과 같이 아끼고 책임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 국가자산 관리에 민간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국가수입을 늘리고 그 성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나. 措置內容

- 국유재산의 활용도제고 및 재정수입증대를 위한 관리체계 정비
(국유재산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개정, 2000.7.27)
 - 민간이 국가에 기부한 재산의 사용·수익권의 전대허용을 통해 민자유치 확대
 - 국유재산 임대활성화를 위한 사용료 체감제도 도입
 - 미활용 재산의 원활한 처분을 위한 국유부동산 매각가격의 체감제도 도입
 - 국유부동산의 집단화 촉진을 위한 교환요건의 완화
 - 국유재산의 활용을 통한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한 우수공무원 포상제도 도입
-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
(국유재산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개정, 2000.7.27)
 - 국유재산의 매각·대부·신탁수입에 대한 지자체 귀속금제도 개선
 - 국유부동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외부전문기관 위탁 확대 등 관리조직 개선안 강구
 - 민간의 경영기법 도입을 위한 분양형 신탁제도의 도입
 - 국유농경지의 사용료 산정방식 간소화 추진
 - 지자체의 비영리공익사업(양로원, 고아원등)에 대한 국유지 무상사용 허용
 - 국유재산관리의 전산화 추진

다. 事業成果

- 민간자본 유치 확대, 사용료 및 매각가격 체감제도 도입 등으로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제고 하고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
- 지자체 귀속금 차등제도 도입, 외부관리위탁 확대, 분양형 신탁제도 도입을 통해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고, 민간 경영마인드 도입

共通 2) 證市安定과 經濟不安心理 解消 : 385(03-70-14)

가. 指示內容 (2000년 9월 19일, 제38회 국무회의시)

- 증시불안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우리경제에 충격을 주는 외부요인들이 큼.
그러나 국내투자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안정시키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증시안정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람

나. 措置內容

- 기업의 자사주 취득 대폭 지원
 - 자사주처분 손실준비금 제도 도입 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00.12월)
- 상장법인의 이익소각 절차 완화
 - 이사회 의결에 의한 이익소각절차 마련 등 증권거래법 개정('01.3월)
- 연기금의 주식투자 제약요인 해소방안 마련('00.10월) 및 자본시장에서의 연기금 역할 제고방안 마련 ('01.4월)
- 장기투자자인 보험회사의 주식투자규제 완화 : 보험업법시행령 개정 ('00.12월)
- 언제든지 환매가 자유로운 개방형 Mutual Fund 허용
 - 과세문제해결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00.12월)
-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2000말까지 투신사에 2조원 유동성 지원 ('00.12월)

다. 事業成果

- 정부의 증권시장 안정의지를 시장에 인식시킴으로써 투자심리안정에 기여
-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요기반을 확보함으로써 기업의 자금조달기회를 확대하고 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설치 ('01.2월)

共通 3) 公企業 監査結果에 따른 徹底한 改善 : 386(03-70-45)

가. 指示內容(2000년 9월 19일, 제38회 국무회의시)

- 금번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고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게 되었음.
공기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철저한 책임추궁과 함께 개선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

나. 措置內容

- 인건비 등 부당집행 개선
 - 2000년 타 예산과목을 인건비로 전용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조치
- 누진제 폐지 지연 등에 따른 중간정산 퇴직금 과다지급 개선
 - 1999년 퇴직금 누진제 폐지로 향후 발생소지 제거
- 퇴직금제도 개선대가로 복리후생비 등 부당 인상 개선
 - 1999년 퇴직금누진제 폐지로 향후 발생소지 제거
- 연차휴가일수 과다산정으로 퇴직금 과다지급 개선
 - 2001년 개정된 노동부 지침을 공시관련 규정에 반영

〈한국조폐공사〉

- 노사합의에 의한 노조전임자 과다운영 시정조치(2001.1.13)
 - * 전임자수 감축 : 2명 감축(11名 → 9名)

다. 事業成果

- 퇴직금누진제를 폐지, 민간기업체에 비하여 과다하게 지급된 퇴직금 규모를 축소하여 공공
부문의 개혁의지를 적극 실천하고, 향후 공사 수익성 개선에 기여
- 인건비 집행을 인건비 예산과목으로만 한정, 변칙적 인건비 인상을 차단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 한국조폐공사의 전임자 2명 감축인력은 생산인력으로 활용
 - 연간 9천만원 정도 원가절감 및 신 노사문화 구축에 기여

共通 4) 市場의 信賴回復을 위한 勞力 : 399(03-70-49)

가. 指示內容(2000년 10월 31일, 제44회 국무회의시)

- 현재의 경제문제 해결은 시장 원리에서 찾아야 하며 이를 위해 시장의 신뢰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함. 시장이 금감원과 은행 정부를 신뢰할 때 경제개혁에 성공할 수 있음.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정책이 투명하게 수립되고 운영되어야 하며, 국민에 대한 홍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시장 신뢰회복을 위해 홍보대책을 세워 주기 바람

나. 措置內容

- 장·차관 주요여론홍보실적
 - 방송(TV,라디오) 출연 : 85회
 - 신문 인터뷰 등 : 45회
 - 강연 : 81회
 - 기자간담회 : 212회

○ 보도자료 배포실적 : 473회

○ 주요경제홍보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1. 경제장관들이 참여하는 경제협의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경제협의회 개최 (10개도시 : 10회) ○ 경제교육 실적 : 7회(3,296명) ○ TV토론회 개최 : 5회
2. 정부신뢰회복관련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홍보물제작배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자: 18회, 423,400부 - 팸플릿: 15회, 410,500부 - 영상간행물: 9회, 4,400개 · 홈페이지게재: 국문4,827회, 영문 512회 · 전자뉴스 Korea Economic update(송부:(1회당, 3,805명)6회) ○ 광고(7회) 및 설문조사(4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고: 신문1회, 전광판3회, 방송3회 - 설문조사: 4회 ○ 재경부 홈페이지개선
3. 정부신뢰회복 홍보관련 종합점검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홍보위원회운영: 3회 개최 ○ 경제홍보대책회의 개최: 30회(매주 금요일개최) ○ 경제부처공보관회의 개최: 2회 ○ 정책심포지움 개최: 1회

다. 事業成果

- 시장원리에 의한 정부 신뢰회복은 정부가 존재하는 한 계속 노력하여야 할 과제임으로 평상 업무수행시 고려될 사항 인식시킴

共通 5) 설 綜合對策 마련 : 410(28-70-50)

가. 指示內容(2001년 1월 19일, 제2회 국무회의시)

- 물가관리, 체불임금, 교통문제 등 설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바라며, 불우이웃에 대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모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여 주기 바람

나. 措置內容

-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 마련
 - 설 성수품 공급 확대
 - 대책기간(1.11~1.22)을 설정하여 정부비축·생산자단체 방출물량을 확대하고 민간 보유 물량 출하확대를 유도(사과, 배, 쇠고기 등 제수용품 중심으로 24개 품목을 중점 관리하여 평시 대비 최고 3배까지 확대 공급)
 - 설 성수품 수송대책 추진
 - 성수품 수송화물차에 대하여 특별시, 광역시의 도심통행제한 완화
 - 부처별 대책반 편성 운영
 - 부처별로 소관품목에 대한 대책반을 편성·운영하여 수급 및 가격동향 일일 점검
- 설 성수품 가격안정 및 유통질서 확립
 - 생산자단체를 통한 설 성수품 특판행사 실시
 -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의 매장, 직판장 등에서 설 성수품 5~30% 염가판매(1.11~1.23)
 - 불공정거래행위 단속
 -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현장점검 실시(1.19~22, 공정위)
 - 원산지표시 특별단속(1.8~1.23, 농산물품질관리원, 수의과학검역원, 수산물검사소, 자치단체사법경찰관,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등 활용)
 - 개인서비스요금의 부당편승인상 방지
 - 자치단체별로 물가대책상황실 운영, 관계기관합동지도·점검반 운영

다. 事業成果

- 설날 성수품 공급확대 등 물가안정대책을 범부처적으로 추진하여 서민생계 안정 도모

4. 推進中인 指示事項

1) 우리사주信託 制度(ESOP) 積極 推進 : 194(03-31-11)

가. 指示內容(1999년 3월 2일, 제7회 국무회의시)

- 우리사주신탁제도(ESOP)를 적극 추진하여 공평한 고통분담 및 성과배분원칙을 수립

나. 지금까지 措置內容

- 종업원에게 자사주 취득기회를 확대하여 종업원 재산형성 지원과 경영성과 향상을 위한 유인을 제공하기 위하여 『ESOP제도 도입방안』 마련('01.9월)
 - 도입방안을 반영한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 추진중('01. 12월)
- 세제지원 사항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01. 12월)

다. 向後 推進計劃

- 증권거래법시행령개정 완료

2) 貧困退治를 위한 對策 樹立 : 310(03-31-19)

가. 指示內容(2000년 2월 8일, 제6회 국무회의시)

- 올해를 빈곤퇴치의 해로 정하고 총리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책을 수립
 - 빈곤퇴치를 위하여 일자리 창출을 추진, 특히 젊은이들의 취업대책 마련이 긴급, 국민 기초 생활보장법 시행전이라도 실질적인 생활보장방안을 마련하고 음성소득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적하는 한편 기업들의 기부문화 활성화 유도

나. 지금까지 措置內容

- 빈곤퇴치를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도 긴급하다는 판단하에 2000년부터 금년 3/4분기까지 약 10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2001년 실업율을 3.7%대로 안정시킴
 - 2001년 실업율 3%대로 안정, 문화산업진흥기금 1,818억원 조성, 6,169억원 규모의 벤처투자 자금 조성, 중장년층 실업자 대상 특별훈련과정 개설, 취업유망분야 훈련인원을 1만명 수준으로 확대, 청년인턴사업 39천명 실시, 소상공인 창업자금 지원 3,200억원 수준으로 확대 등
- 청소년실업대책 수립(2001.12)
 - 7%대의 높은 실업율을 보이는 청소년실업율 해소를 위해 약30만개의 일자리 및 직업훈련기회를 제공하는 “청소년 실업대책” 수립·시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2000.10) 및 사회보장체계의 꾸준한 확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최저생계비 이하 모든 저소득층에 대하여 생계, 의료, 교육 등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 (01년 수급자 : 155만명, 3.2조원)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700명 증원등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수립·시행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01.8)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수혜대상에 포함
 - 모성보호 법안 개정(01.8)으로 출산휴가기간을 종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고, 육아휴직급여를 신설, 65세 이상 노인에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장애수당 및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사업 실시
- 근로자 재산형성 및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하여 우리사주신탁제도를 도입(01.8)
 -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한도를 종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자영업자와 봉급생활자간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
- IMF위기로 악화되던 소득분배 구조는 정부의 사회안전망 확충노력 등에 힘입어 2000년부터 차츰 개선되는 추세 【 지니계수 : 5.41 (98년) ⇒ 5.04 (01.2/4분기) 】

다. 向後 推進計劃

- 빈곤퇴치를 위해 각부처 1급을 위원으로 하는 「중산서민층 대책 추진회의」를 구성·운영하여 기존시책의 수시 점검 및 신규시책을 개발하고, 추진중인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각부처 장·차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그 점검결과를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기추진 시책의 내실화 도모

3) 産・學・研・政 協力の 強化 : 311(03-31-20)

가. 指示內容(2000년 2월 16일, 과학기술부 업무보고시)

- 군·행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첨단기술제품을 구매할시 국내 벤처기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군 관련 사항은 국방부가, 기타 부문 관련사항은 재정경제부(조달청)가 추진

나. 지금까지 措置內容

- 우수제품 확대
 - 우수제품 선정 및 판로지원
 - 2000년 판로지원 실적 : 718개 제품 선정, 5,250억원 판로지원
 - 2001년 판로지원 실적 : 876개 품목 선정, 7,171억원 판로지원
 - 우수제품 심사(연 6회)
- 우수제품 판로지원 강화를 위한 조치
 - 선정된 우수제품에 대해 우선적으로 제3자 단가계약 체결
 - 조달 e-mall구축(2001.3.1)
 - 우수제품으로 제3자 단가계약체결물품 대상(168개 제품 1,414규격)
- 우수제품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한 심사기준 개정
 - 우수제품선정 외부심사위원 확충(110명 → 144명)
 - 우수제품 선정심사기준 개정(2000.12.9)
 - 중소기업·벤처업체의 우수제품 신청 편의 도모를 위한 신청서류간소화(2000년부터)
- 우수제품 홍보강화
 - 2000년 우수제품 전시회 개최(3회)
 - 카탈로그, 팸플렛 제작·배포
 - 중소기업 홈페이지 구축 지원(2000.5.10부터)
- 우수제품 분리발주 활성화
 - 각 수요기관 및 대한건축사협회에 분리발주 협조요청(2000.2.24)
 - 중소기업특별위원회에 분리발주 단계적 확대방안 건의 (2000.12.22)
 - 우리청 감리공사중 일괄대행공사에 대하여 우수제품을 우선 설계·반영하여 분리발주 시범실시(2001.2.17부터)

다. 向後 推進計劃

- 선정된 우수제품의 사후관리강화
 - 품질관리, A/S상태, 수요기관 불만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

4) 經濟安定對策 講究 : 322(03-31-21)

가. 指示內容 (2000년 2월 22일, 제8회 국무회의시)

-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물가, 금리, 외환, 주식, 서민생활 등 5개 분야가 안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특히 중요한 것은 서민생활의 안정으로 IMF위기 이후 소득분배구조가 더욱 왜곡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키 위한 제반 정책을 강구하여 시행하기 바람.

나. 지금까지 措置內容

- 2001년 물가는 2.3%(98년 7.5%), 회사채금리는 7.01%(97년 28.98%), 외환보유고는 1.029억불(97년 89억불)로 확충되는 등 경제전반이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위기극복과 구조개혁을 위해 꾸준히 해결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고 대외여건 불안 요인도 상존하는 만큼 4대부문 구조개혁을 더욱 내실있게 시행하는 노력강화 필요
- IMF위기로 악화되던 소득분배 구조는 정부의 사회안전망 확충노력 등에 힘입어 2000년부터 차츰 개선되는 추세 【 지니계수 : 5.41 (98년) ⇒ 5.04 (01.2/4분기) 】
- 소득분배구조의 왜곡을 시정하고 상대적으로 외환위기사 고통받은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물가 및 서민생활안정 종합대책(2001.5), 중산서민층 대책 보고회의(2001.7), 10대 중점추진과제별 중산서민층대책 경제장관회의(2001.11~), 전부처 장차관의 현장점검 실시(2001.11~12) 등 일련의 대책을 수립·시행
- 2000년부터 금년 3/4분기까지 약105만개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시행한 결과 2001년 실업율을 3%대로 안정시켰으며, 7.6%대의 상대적으로 높은 실업율을 보이는 청년층 실업률 해소를 위해 별도의 대책을 마련(2001.12)
- 사회보장체계의 강화를 위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700명을 증원하고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01.8)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수혜대상에 포함시키며, 모성보호 법안 개정(01.8)으로 출산휴가기간을 종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고, 육아휴직급여를 신설, 65세 이상 노인에 경로연금 지급하고, 장애수당 및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사업 실시
- 서민층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대주택 활성화대책(01.8)을 시행하여 공공택지의 임대주택용지 비율을 30%로 상향조정하고, 서민의 전월세보증금 융자한도를 보증금의 70%까지 확대
-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하여 우리사주신탁제도를 도입(01.8)하고,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소득 공제한도를 종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자영업자와 봉급생활자간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

다. 向後 推進計劃

- 물가, 금리, 외환, 주식, 서민생활 등 5개분야의 안정을 위하여 수시로 경제장관간담회 등을 통해 현상을 체크하고 개선점을 발굴하여 대책을 마련
- 특히,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각부처 1급을 위원으로 하는 「중산서민층 대책 추진회의」를 적극 활용하고 각부처 장·차관의 현장방문 등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되는데 역점

5) 庶民生活과 物價安定 對策 : 389(03-31-22)

가. 指示內容(2000년 10월 4일, 제40회 국무회의시)

-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추진하여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에너지 가격인상이나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더라도 서민들에게 주는 부담은 최소화하도록 해야 함
- 가장 중요한 것은 물가의 안정을 이루는 것이며, 물가안정대책 및 월동기대책을 추진바람.
 - ▲ 추가지시 (2001년 1월 15일, 재정경제부 업무보고시)
 - 중소기업과 서민에 대한 각별한 대책을 세워야 하며, 물가와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공공요금 등의 인상을 억제하고, 공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을 통해 가격인상요인을 흡수토록 함
 - 중산·서민대책이 당사자들이 피부로 실감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집행을 해주기 바람

나. 지금까지 措置內容

- 공공요금 등 물가의 안정적 관리
 - 중앙공공요금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지방공공요금도 안정노력 강화 협조
 - 대학총장간담회·교육감협의회 개최, 학원비 담합인상 관련 합동점검 등 교육비 경감 노력
 - 농축수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
 - 설·추석 제수용품 등에 대해 생산자단체 출하조절사업 등을 활용하여 수급안정
 - 봄가뭄, 장마시 채소 등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 추진
 - 명태 등 수산물은 정부비축 수입추진 및 방출 실시
 - 국제곡물, 원자재의 수급 안정
 - 미테러사태 이후 석유·원자재에 대한 비상대책 수립, 할당관세 적용확대(상반기 61개 → 하반기 70개 품목) 및 정부비축자금 활용 확대
- 중소기업·자영업자지원 및 유통구조 개선
 - 신용보증기관의 보증공급 확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확대 및 세정지원 등 중소기업·자영업 등에 대한 지원
 - 한국소비자보호원에 가격종합정보망 구축 운영, 유통합리화사업의 유통정보화에 대한 용자한도 확대, 택배표준약관 제정 등 유통구조 개선
- 서민금융이용자 보호대책 추진
 - 서민금융 이용자 보호대책 강구
 - 부당한 채권추심이나 고리대금행위 등에 대한 단속강화, 선의의 신용불량자 보호조치 및 신용불량자 등재시 사전통지 의무화 등 제도 개선 등

- 신용카드제도 개선
 - 신용카드 발급기준 강화, 도난·분실된 신용카드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기간(현행 25일) 확대 추진 및 근로자 신용카드사용액 소득공제범위 확대 등
- 농어가 경영안정지원 및 실업대책 추진
 - 농어가 경영안정 지원
 - 농어업인 부채경감 특별대책 추진, 논농업 직불제 시행,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유도 및 도시·농촌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초고속통신망 보급 및 농어업인 정보화 교육 추진
 - 실업대책 추진
 - 청년실업자의 IT전문교육 실시, 대학생 중소기업 현장체험 프로그램 제도도입 시행, 중장년층을 위한 소상공인 창업자금 지원 등
- 소비자의 권익보호시책 및 더불어 사는 사회 구현
 - 소비자의 권익보호시책 추진
 - 인터넷 쇼핑몰업 등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 피해보상규정 신설, 애완견 판매업, 이사 화물 취급사업에 대한 소비자 피해보상기준 강화
 - 불우이웃, 장애인 등과 더불어 사는 사회 구현
 - 자활후견기관 확대 및 사회복지 요원 확충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산적 복지기능 확충
 - 불우이웃, 백혈병·소아암 어린이를 위한 성금모금 및 노인, 장애인·노숙자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 지속 추진

다. 向後 推進計劃

- 기 조치 사항에 대한 추진실적을 계속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보완대책 수립·시행

6) 公的資金의 透明한 執行 : 393(03-31-24)

가. 指示內容(2000년 10월 10일, 제41회 국무회의시)

- 공적자금과 관련해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국민에게 공개해 의심이 없도록 해야 하며 그간 실수가 있었다면 솔직히 인정해야 함
- 근본적으로 과거 정권에서 누적된 폐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공적자금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것이 왜 필요한지, 왜 과거에는 추가자금이 필요 없다고 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소상히 설명해야 함

나. 지금까지 措置內容

- 공적자금에 관한 대 국민 홍보 및 보고 강화
 - 공적자금 설명 팸플렛, 홍보만화 등을 설날·추석 귀성객을 중심으로 배포
 - 공적자금에 대한 “경제 이슈”를 작성하여 대학교, 언론계 등 여론주도층을 중심으로 배포 (2001.6)
 - 「공적자금관리백서」 발간 (2001.8)
 -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오해에 대해 해명하기 위해 “공적자금 7조원, 과연 빼돌렸는가?” 팸플렛 배포 (2001.12)
 - 홈페이지에 매월 공적자금통계를 게시하고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주요안건과 의결사항 공개
- 공적자금 운용현황 대국회 보고
 - 2001년 3·6·9·12월말에 국회에 공적자금 운용현황보고서 제출
 - 4·6월 임시국회에서 재정부장관(4.23), 공적자금관리위원회위원장(6.21)이 재정경제위원회에 별도로 보고
 -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박승 위원장 보고 (9.11)

다. 向後 推進計劃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 및 정보제공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양질의 공적자금관련 정보를 제공 (2002.1 예정)
 - ‘홈페이지 자체에 대한 홍보’를 통해 일반 국민의 공적자금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홈페이지 Q&A 전담요원을 배치하여 대응성을 제고

7) 企業金融 活性化 對策 마련 : 412(03-31-25)

가. 指示內容(2001년 1월 15일, 재정경제부 업무보고시)

- 전경련이 1월 10일 발표한 조사결과를 보면, 500대 기업의 자금사정이 어렵다고 함
 - 은행이 더 노력을 해야 할 것임
 - 또, 기업자금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함

나. 지금까지 措置內容

- 금리안정기조의 유지
 - 한은의 신축적인 금리정책 운용
 - 한은의 목표 콜금리를 5.25%에서 네 차례(2,7,8,9월)에 걸쳐 4%로 인하
 - 국고채 금리 안정을 통해 은행수신금리 인하 유도
 - * 국고채(3년) : 6.14%(1.10) → 5.91%(01.12말)
 - * 은행수신평균(월중) : 6.32%(1월) → 3.96%(11월)
- 회사채 차환발행 지원
 - 회사채 신속인수 방안 시행
 - '01년 중 약 2.5조원 인수('01년으로 종료)
 - P-CBO, CLO의 지속적인 발행
 - '01년 중 8.2조원 발행
 - 고수익채권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01.6.7) · 시행 중
- 금융기관의 기업대출 확대 유도
 - 금융기관 임직원 불안심리 해소
 - BIS 비율 중심의 건전성 평가를 탄력적으로 운용
 - 은행 목표 BIS비율을 10% → 8%로 하향 조정('01. 1월 기 조치)
- 신용보증 공급 확대
 - 중소·중견기업에 39조원 공급
- 장기 안정적인 주식 수요기반 확충
 - 연기금주식양도차익 비과세, 증권거래세 비과세 등을 통한 연기금 투자제약 해소
 - 1년 이상 장기 주식보유자 배당소득 비과세 등을 통한 장기배당투자 유도
 - 장기증권저축 도입

다. 向後 推進計劃

- 동 조치로 인해 '01년 중 기업의 자금사정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도록 모니터링 강화
 - * 당좌대출한도 소진율(%) : ('01.말) 17.7 → ('01.12말) 12.1
 - * 자금사정 BSI : ('01.1월) 85 → ('01.12월) 109

8) 外換市場 安定方案 講究 : 413(03-31-26)

가. 指示內容(2001년 1월 15일, 재정경제부 업무보고서)

- 헤지펀드 등 단기자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외환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나. 지금까지 措置內容

- 국제금융센타를 통하여 국내외 외환시장, 주식시장, 역외 선물환거래(NDF)시장 등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을 지속
- 외환전산망 등을 통해 헤지펀드 등 외국인 단기투기성 자본 유출입 동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
- 재경부, 금감원, 한은, 국제금융센터 등 모니터링 관련기관간 실무점검회의를 개최 ('01년 5회 개최)
- ASEAN 사무국이 작성한 단기자금 이동관련 template을 기초로 역내 국가간 bilateral basis로 자료교환 추진기로 결정('01.5.9 ASEAN+3재무장관회의)
 - 현재 일본·홍콩과 자료교환 실시중이며 태국과는 협의중

다. 向後 推進計劃

- 당초 계획의 지속적 추진

9) 中小企業과 庶民에 對한 各別한 對策 樹立 : 415(03-31-28)

가. 指示內容(2001년 1월 15일, 재정경제부 업무보고시)

- 중소기업과 서민에 대한 각별한 대책 수립
 - 중소기업과 서민에 대한 각별한 대책을 세워야 함. 이들은 우리 사회의 중추이고 경제의 핵심임
 -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창의력이 모든 것을 좌우하며 중소기업이 발빠르게 대응해야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음

나. 지금까지 措置內容

- 중소기업의 정보화 촉진
 - 정보화 지원대상 중소기업과 IT업체간 계약체결(12,968개사),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실시지원 및 공통인프라 확충
-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2001년 1,090개 업체 선정, 산·학·연 컨소시엄 사업(350억원 지원)
 - 중소기업 기술이전개발사업(130개 과제에 88억원 지원), 대기업·중소기업간 부품·소재 공동 기술개발사업 추진(2차에 걸쳐 328개 업체에 693억원 지원)
- 중소기업의 자금, 판로, 구조개선 등 경영안정 지원
 - 2.2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신용보증기관을 통한 40.7조원 보증지원, 구조조정 전용펀드 조성,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
- 벤처기업의 성장기반 구축
 - 벤처투자자금 1조원 조성, 중소·벤처 창업자금 2,499억원 지원
 - 11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300억원 국비 지원

다. 向後 措置計劃

- 중소기업의 정보화 촉진 : 2003년까지 3만개 중소기업 IT화 완료예정
-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 「중소기업 기술경쟁력제고 5개년 계획」(2001~2005)의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
- 중소기업의 자금, 판로, 구조조정 등 경영안정 지원 및 벤처기업의 성장기반 구축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확대할 계획

10) 傳·月賃 對策 마련 : 494(03-31-29)

가. 指示內容(2001년 3월 13일, 제10회 국무회의시)

- 집세가 폭등하여 서민들의 고통이 크며, 특히, 전월세 비율이 역전되어 서민들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음
-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되어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대책을 세워 주기 바람

나. 지금까지 措置內容

- 세입자 보호 강화
 - 영세민 전월세 보증금 지원
 - 영세민 전월세 보증금 지원 확대, 근로자·서민전세자금 지원 확대
 - 전월세보증금 우선변제 보장한도 인상
 - 주택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 서울, 인천, 울산, 성남, 전주, 춘천
- 임대·소형분양주택 공급 활성화 추진
 -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지원
 -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주택 매입자금 지원
 - 부동산업장 정상화를 위한 국민주택기금 지원
 - 임대·소형분양 주택공급 확대
 - 임대주택 건설 확충(2001년도중 11월말 75천호 건설)
 - 2003년까지 국민임대주택 20만호 건설('01년 3.5만호→'02년 5.3만호→'03년 8만호)
 - 공공개발택지의 임대주택용지 공급비율을 30%까지 확대
 - 재개발사업지구내 임대주택 건설시 용적률 20% 인상
 - 임대주택 보증금 법인소득 50%를 5년간 감면 지원
 - 소형평형의무비율 제도 재도입(2001년 12월 1일 시행)

다. 向後 推進計劃

- 전·월세 가격동향을 계속 점검하고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 추진

11) 私金融의 弊害 根絶 : 507(03-31-30)

가. 指示內容(2001년 4월 17일, 제15회 국무회의시)

- 사금융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 보도를 보면 서민들이 갖가지 협박을 당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
 - 연 1,200%의 사채이자자가 있는가 하면 채권 회수 과정에서 가족에 대한 협박과 신체적인 가혹행위 등이 있다고 함
- 사금융의 폐해는 사라져야 함
 - 사회를 위해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서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됨
 - 관계부처는 사금융을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해 주기 바람

나. 지금까지 措置內容

- 고리대금 행위 및 불법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
 - 금융감독원에 신고센터 설치('01.4.2)
 - '01.11월까지 총 3,063건 신고 접수, 이 중 544건 관계기관 통보
 - 신고된 내용을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에 통보하여 단속
 - 국세청은 '01.4.20일부터 악덕사채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
 - 공정위는 '01.6.11일부터 91개 사채업자에 대해 직권 조사
 - 검찰, 경찰도 '01.4.20일부터 무기한 단속
- 신용불량자 제도 개선
 - '01.5월 말까지 연체금을 상환한 신용불량거래자 153만명의 기록을 삭제
 - 신용관리규약을 개정('01.5.1일 시행)함으로써 연체금 변제 즉시 기록이 삭제되는 소액기준을 상향 조정
- 신용카드발급기준 강화
 - 신용카드발급기준 중 소득기준을 엄격히 운용
 - '01.4.21일까지 카드사의 자체발급기준을 정비토록 하고 점검('01.5.17~19)
 - 신용카드발급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금감위 규정 개정('01.12.14)

- 과도한 연체이자율에 대한 제재를 통한 연체금리 인하 유도
 - 공정위가 3개 카드사에 대해 시정조치(3월)를 하는 등 카드사 등의 높은 연체이자율을 인하하도록 유도 → 카드사들이 연체이자율을 최고 29%에서 24~25% 내외로 인하
- 금융이용자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 추진
 - 사채업자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정 추진
 - '01.6.14일 동 법안을 국회에 제출, '01.12월 말 현재 재경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

다. 向後 推進計劃

- 사금융 피해 감소(신고건수 '01.4월 814건 → '01.11월 269건), 사금융 평균 금리 하락('01.4월 연 258% → '01.11월 연 162%) 등의 효과가 있었음.
- 사채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추진

12) 對内外 經濟問題 積極 對處 : 528(03-31-32)

가. 指示內容(2001년 7월 6일, 제29회 국무회의시)

- 미국, 일본, EU경제 등이 어려워짐에 따라 우리경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이런 때일수록 국민적 협의와 여야협력이 필요함. 여야정 3자간 대화의 활성화를 통해 대외적 문제가 우리경제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국내경기 활성화를 통해 내수를 진작시켜야 함.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고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나. 지금까지 措置內容

- 여야정 정책포럼 개최
 - 5.19~20일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천안)에서 제1회 여야정 정책포럼을 개최
(논의 주제 : 금융·기업 구조조정, 서민생활 안정 등)
 - 8.9~10일 중앙공무원교육원(과천)에서 제2회 여야정 정책포럼을 개최
(논의 주제 : 대외여건 악화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 국민 세 부담 경감 등)
 - 10.12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여야정 정책협의회 개최
(논의 주제 : 제2차 추경편성방안, 주식시장 안정방안)
- 하반기 재정집행 활성화 추진
 - 2차레의 추경편성(1차 5.1조원, 2차 1.6조원)
 - 재정집행특별점검단을 통해 재정자금 집행실적을 철저히 점검
- 수출 및 투자활성화
 - 수출상품의 다양화·고급화를 위해 부품·소재를 수출주력분야로 육성
 - 무역금융 지원 강화('00년 84억불 → '01.1~11월 92억불)
 - 임시투자세액공제(10%)의 조기공제 허용 등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산은, 기은 등 산업금융전문기관의 설비자금 공급 확대
(산은 : '00년 4.5조원 → '01예상 4.8조원, 기은 : '01예상 1.96조원)

다. 向後 推進計劃

- 주요 현안사항과 관련하여 여야정 정책협의를 수시개최 추진
- 2002년에도 상반기중 재정 조기집행(상반기중 전체 예산의 65% 배정) 및 재정집행특별점검단 상시 운영
- 수출 금융·보험 지원과 수출품목 다변화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특히 월드컵 개최와 연계한 수출마케팅 활동 강화

13) 金融機關 民營化 推進 : 534(03-31-33)

가. 指示內容(2001년 8월 28일, 제35회 국무회의시)

- 금융기관의 정부소유를 종결시키고 금융기관을 민영화하는 계획을 적극 마련
- 동 계획에 따라 정부 소유주식을 국내외에 매각. 특히, 서울은행과 대한생명 매각문제도 조속히 매듭

나. 지금까지 措置內容

- 금융기관 주식을 바탕으로 하는 선택형 교환사채 발행
 - 조흥은행, 우리금융지주회사주식을 근거로 5억불 수준의 선택형 교환사채 발행(2001.12)
- 서울은행, 대한생명 매각협상 진행중
-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신한, 국민·주택은행 우선주 매각
 - 매각완료(2001.10.25)

다. 向後 推進計劃

- 기진행중인 협상을 가급적 조속히 마무리하고 증시상황, 금융기관 경영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분을 매각

14) 企業 規制緩和 : 538(03-31-34)

가. 指示內容(2001년 11월 12일, 48회 국무회의시)

- 제프리 존스 주한 미상공회의소장의 회견기사를 보면 우리나라는 아직 규제가 심해 사업하기가 어렵다는 비판을 하고 있음
- 경제부총리는 실태와 개선책을 조사해 보고 바람

나. 지금까지 措置內容

- 기업활동규제·경영애로 관련 실태조사 처리
 - 기업이 체감하는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위하여 「민·관합동 기업규제 종합실태조사」 실시('01년 하반기), 창업·공장설립·외국인 투자분야 등에서 규제 완화
 - 창업사업계획 승인처리기한 단축(45일→30일), 「공장설립 지원센터」 설치, 「외국인투자 지역」 지정요건 완화(투자금액 1억불 이상→5천만불 이상) 등 305건 수용
- 경제계 의견수렴지속 추진
 - 「정·재계 간담회(5.16)」, 「여야 정책포럼(5.19)」 등을 통해 기업구조개혁의 기본틀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수출·투자촉진을 위한 기업경영환경 개선조치(5.31)」를 마련
 - SOC 민자사업에 대한 출자총액 제한 예외 인정, 부채비율의 탄력적 적용 등
 - 전경련 등 재계로부터 분기별로 기업이 경영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규제완화 대상을 건의받아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

※ '00년 10월 이후 경제계건의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총 191건 수용

다. 向後 推進計劃

- 분기별로 경제계 건의를 접수·개선하는 등 경영현장의 애로요인을 발굴, 지속적으로 개선

15) 中國의 WTO加入 對備 徹底 : 539(03-31-35)

가. 指示內容(2001년 11월 12일, 제48회 국무회의시)

- 中國의 WTO 가입은 우리에게도 큰 영향을 주게될 것임. 인접국의 방대한 시장을 활용해 한류 등을 문화산업으로 발전시켜 IT와 연계되도록 하는 등 어려울 때 돌파구를 찾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임
- 中國시장이 개방되면 다른 나라들도 많이 들어올 것이므로 우리도 더 한층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이제 中國이 제2의 수출시장으로 떠오른 만큼 정부와 민간이 합동으로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연구하고 그 결과를 국내 경제인들에게도 교육시켜 주기 바람

나. 지금까지 措置內容

- 中國시장 진출 대책 수립
 - 대외경제장관회의 상정 (2001. 11. 17)
- 中國의 WTO가입에 따른 대책수립 회의 개최 및 종합 대책반 구성
 - 재경부 등 17개 부처, KOTRA 등 3개기관이 참석하여 中國의 WTO가입관련 대응방안에 대한 부처별 진행상황 점검 및 종합 대책반 구성 (2001. 11. 22)
 - 참석자 : 재경부 국제업무정책관(주재), 국무조정실, 교육인적자원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금융감독위원회, 중기청 등 16개부처 담당과장 및 KOTRA, 전경련, 대한상의 등 3개기관 中國담당 임원

다. 向後 推進計劃

- 한·중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본목표, 방향, 전략 모색
 - 민·관·학계로 구성된 「中國전문가 포럼」 연찬회 개최 (2월)
- 한·중 교류협력 증진 종합대책 마련(상반기)
 - KIEP, KIET, 금융연구원, 민간연구소 등 합동으로 연구용역 추진

共通 1) 中産層과 庶民生活 安定에 走力 : 298(03-70-31)

가. 指示內容(1999년 12월 28일, 제53회 국무회의시)

- 중산층의 안정과 서민생활을 돌보는데 주력, 어려운 사람들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을 조기집행하는 방안을 강구,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통해 고용안정을 기하고, 대다수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 해소를 위해 소득분배 개선에도 역점

나. 지금까지 措置內容

- IMF 위기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 및 향상에 주력하기 위하여 일련의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 200만개 일자리창출 대책(2000.1), 중산·서민층 재산형성 촉진대책(2000.3),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세제개혁(2000.4), 물가 및 서민생활안정 종합대책(2001.5), 중산서민층 대책 보고회의(2001.7), 10대 중점추진과제별 중산서민층대책 경제장관회의(2001.11~), 전부처 장관관의 현장점검 실시(2001.11~12)
- 2000년부터 금년 3/4분기까지 약105만개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
 - 2001년 실업률 3%대로 안정, 문화산업진흥기금 1,818억원 조성, 6,169억원 규모의 벤처투자자금 조성, 중장년층 실업자 대상 특별훈련과정 개설, 취업유망분야 훈련인원을 1만명 수준으로 확대, 청년인턴사업 39천명 실시, 소상공인 창업자금 지원 3,200억원 수준으로 확대 등
- 사회보장체계의 강화
 - 사회복지 전달공무원 700명 증원 등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수립·시행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01.8)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수혜대상에 포함
 - 모성보호 법안 개정(01.8)으로 출산휴가기간을 종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고, 육아휴직급여를 신설, 65세 이상 노인에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장애수당 및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사업 실시
- 서민층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대주택 활성화대책(01.8)을 시행하여 공공택지의 임대주택용지 비율을 30%로 상향조정하고, 서민의 전월세보증금 융자한도를 보증금의 70%까지 확대
-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하여 우리사주신탁제도를 도입(01.8)하고,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한도를 종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자영업자와 봉급생활자간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
- IMF위기로 악화되던 소득분배 구조는 정부의 사회안전망 확충노력 등에 힘입어 2000년부터 차츰 개선되는 추세 【 지니계수 : 5.41 (98년) ⇒ 5.04 (01.2/4분기) 】

다. 向後 推進計劃

-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장단기적인 시책을 꾸준히 수립·추진, 특히 최근 들어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청소년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 대책 마련
- 각부처 1급을 위원으로 하는 「중산서민층 대책 추진회의」를 구성·운영하여 기존시책의 수시 점검 및 신규시책을 개발하고, 추진중인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각부처 장·차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그 점검결과를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기추진 시책의 내실화를 도모

共通 2) 4大部門 12大 核心改革課題의 蹉跎없는 推進 : 392(03-70-46)

가. 指示內容(2000년 10월 4일, 4대부문 합동보고회의시)

- 재정부장관 등 관계부처장관은 4대부문 12대 핵심개혁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야 할 것임
 - 금융·기업개혁은 연내에, 공공·노동개혁은 내년 2월말까지 반드시 완료
- 이를 위해 대통령이 직접 매월 그 추진상황을 점검할 예정임
 - ▲ 추가지시
 - 4대부문 개혁과제 완결을 통해 경제체질을 개선(2001년 1월 22일, 제4회 국무회의시)

나. 지금까지 措置內容

- 2001.2월말까지 4대부문 12대 핵심개혁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시장경제시스템의 기본틀이 완성되고 상시적인 구조조정이 가능하게 됨
 - 잠재부실기업의 정리와 기업지배구조·재무구조의 개선
 - 금융기관의 건전성 회복과 자금흐름의 정상화
 - 공기업 경영혁신과 민영화로 공공부문 효율성 증진
 - 법과 원칙에 따른 노사분규 해결과 상생의 노사문화 유도
- 3월이후에는 시장을 통한 상시 구조조정시스템의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
 -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상시적 기업 회생 및 퇴출체제 구축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설립 등 시장친화적 구조조정제도 정착 유도
 - GM과 대우자동차 매각에 대한 MOU 체결
 -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금융기관의 수익성 및 건전성이 크게 제고
 - 국민·주택은행의 합병, 우리금융지주회사·신한금융지주회사 설립 등 금융기관 대형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 적기시정조치제도 보완, 제2금융권에 대한 건전성 감독기준 개선 등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체제 강화
 - 5개 공기업 민영화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8개 공기업 자회사 정비 완료
 - 노사화합사업장이 증가하는 등 참여와 협력의 신노사문화 확산

다. 向後 推進計劃

- 앞으로 잔존 개혁과제도 최대한 조속히 마무리하여 우리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안정 성장기반을 구축
- 특히, 2002년 1/4분기까지 지난 4년간 4대부문 구조개혁의 성과와 반성을 토대로 마무리 계획을 작성·발표

共通 3) 人事請託 根絶 : 422(08-70-51)

가. 指示內容(2001년 2월 6일, 제6회 국무회의시)

- 국민의 정부들어 인사개혁에 많은 노력도 기울여 왔고 성과도 있었으나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있음. 인사는 반드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지연, 학연, 친소관계에 따라 이루어져서는 안됨. 아직도 인사청탁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놀라운 일임.
- 전 국무위원들이 인사청탁을 해서도 안되고 받아서도 안됨. 그런 사실이 밝혀질 때는 불이익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할 것임. 청탁이 근절된 공정한 인사관행이 뿌리내리도록 해주기 바람.

나. 지금까지 措置內容

- 전보·승진 인사시 업무추진능력과 자질, 소관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우선 반영하여 지연, 학연, 친소관계 등에 따른 인사청탁을 근원적으로 차단
 - 인사위원회 개최(2001.1~2001.12)
 - 전보 : 국·과장급 전보인사 4회
 - 승진 : 1급~4급 승진임용 8회
 - 5급 승진내정 : 2회

다. 向後 推進計劃

- 부내 인사위원회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활성화

共通 4) 2002年 월드컵大會 準備徹底 : 525(06-70-58)

가. 指示內容(2001년 5월 29일, 제21회 국무회의시)

- 각 부처는 성공적인 월드컵 개최를 위해 행사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선수경기력 향상은 물론 전국민이 주인의식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한 각 부처 스스로 월드컵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발굴하여 적극 추진해 주기 바람

나. 지금까지 措置內容

- 기업의 월드컵 활용봄 조성
 - 경제장관 및 경제단체장, 업계대표들을 중심으로 「민관합동토론회(10.24)」를 개최하였고, 경제분야 지원단 회의(9.5, 11.24), 기업설명회(12.13), 분야별 업계간담회 등 다수를 개최
- 지자체의 활용노력 제고
 - 10개도시 분산개최에 따른 지방경제활성화와 지방도시의 국제화 계기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
 - 지자체 담당관 회의를 개최(11.6, 12.5)하여, 지자체별 경제적 효과 극대화 시책을 공유하고, 특별교부세 100억원을 지원
- 월드컵 경제적 효과 극대화를 위한 각종 시책 수립 및 추진
 - 316개 월드컵 유망기업을 비롯한 월드컵 관련기업에게 산업은행 저리자금 2천억원을 융자지원하고, 지방중소기업청과 디자인진흥원을 통해 상품개발 및 디자인 개발지원 등
 - 「전통문화상품전시회」(10.25~29, 오사카)를 개최하고, 서울 상설전시관(서울지방중소기업청내)을 City Tour에 반영하는 등 전통상품에 대한 홍보와 판로를 지원
- 월드컵 대회관련 지원
 - 해외에서의 원화환전 지원, 신속한 통관지원대책 마련, 월드컵 경기장 건설비 지원을 위한 지방채 인수 및 월드컵 대회 관련 세제감면 지원 등 추진

다. 向後 推進計劃

- 월드컵 경제적 효과 제고를 위한 시책의 차질없는 추진
 - 기수립된 월드컵 경제적 효과 제고방안의 세부과제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관련행사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월드컵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방문객들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
- 월드컵 상품판매를 지원하는 등 월드컵 특수 활용
 - 인천공항, 공항터미널('01.12~) 및 각 개최도시('02.5~10)에 「월드컵 유망상품판매장」을 운영하고, 「월드컵 종합박람회('02.5)」를 개최하는 등 월드컵 상품의 마케팅을 지원

- 대회기간을 전후하여 「한국전통문화상품 전시회」를 개최하여 한국문화를 소개하고 전통상품의 마케팅을 지원
- 국가 및 상품이미지 제고를 통해 수출과 투자를 확대
 - 대회기간 중 「세계일류상품 전시회('02.5~6)」, 「전자로봇 월드컵('02.5)」, 「한일공동패션쇼('02.5~6)」 등을 개최하여 국가 및 상품 이미지를 제고하고, 50여개의 투자 유망기업 CEO를 초청하여 경기관람 및 투자설명회 개최 등 외국인투자 유치 노력을 강화
- IT강국의 이미지를 부각하여 IT산업의 도약기반 마련
 - 외신기자 대상 IT테마투어 실시, 「디지털방송관」 설치 등을 통해 CDMA, 3DTV, 디지털방송 등 고도의 IT기술력 홍보
 - 「Cyber 월드컵 축구대회」·「영상예술 전시회(Digital Art Network)」 개최, 멀티캐스팅 방식의 인터넷방송 실시 등 인터넷 강국의 이미지를 세계속에 각인
- 지방도시 홍보 및 지방경제 활성화
 - 해외자매도시를 초청, 지역상품 전시판매장 및 홍보관 건립, 중소기업 해외Marketing 지원 등 지방도시 및 지방기업 홍보사업 지원, 동 지원을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 확대
- 월드컵 관련 환전, 통관 등 편의 지원
 - 대회 경기운영용품 반입에 대한 관세감면 실시 및 신속한 통관지원, 대회기간중('02.4~7) 해외에서의 원화환전 지원, 월드컵 선수단 등에 대한 조세감면 지원 등

共通 5) 電子政府事業의 蹉跎없는 推進 : 531(07-70-58)

가. 指示內容(2001년 8월 7일, 제32회 국무회의시)

- 재정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재정정보화 사업에 전자정부기능을 활용

나. 지금까지 措置內容

- 국가재정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BPR/ISP 실시(2001.12)

다. 向後 推進計劃

- 2002년 1월중 국가재정정보시스템 개발계약 체결
- 2002년 10월까지 국가재정정보시스템 구축 완료

